

데스크칼럼

이훈기

서부본부장·이사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주민소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이 조례는 이른바 ‘누더기 조례’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만큼 시행 과정에서 보완과 수정이 반복됐다. 신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니라 주민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고 신안의 햇빛·바람 연금은 이렇게 제도의 외형을 갖추게 됐다.

신안군은 2030년까지 해역에 8.2GW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 1인당 연 600만원의 연금지급을 목표로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민간 부문 전국 최초로 신안 풍력(8.2GW)의 1.17% 수준인 자온도 해상풍력단지 96MW 규모가 준공됐다. 이처럼 제도는 현실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정책은 계획 단계를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고

정다운

광주시의원



광주·전남이 새해 벽두부터 지금까지 뜨겁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힘입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대승적 결단이 만들어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닷을 올리면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속한 추진에 시·도민은 조금의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고 정부가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했다.

첫째 재정지원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 재분배 추진을 약속했다.

둘째 서울특별시에서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 직급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파격적 인사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

취재수첩

기본에 충실하자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옛 전남도청, 전일빌딩245, 금남로, 충장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한 번쯤 들어봤거나 거쳐갔을 공간들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등을 집필한 소설가 한강이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 방문의 해’로 선포한 이후 국제행사 연계,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 통합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광주를 찾은 방문객 수(2025년 11월 말)는 전년 대비 6.8%(411만명) 증가한 6501만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노점 도시’로 불리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광지로써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맞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 문화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문

연금이 된 햇빛과 바람 흔들어진 안 된다

그러나 제도가 확대될수록 마찰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 발전량과 입지 조건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일부 주민과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증폭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기존 발전소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소액의 햇빛 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신안군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급을 둘러싸고 ‘누가 얼마를 왜 받는가’ 등의 사실과 다른 정보를 확산시키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자온도의 한 주민은“ 이번 논란으로 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결국 손해는 신안군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이다. 이 갈등은 단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흔들리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해석과 주장들이 난무한다면 그 혼란의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책은 선거의 도구가 되는 순간 신뢰를 잃는다. 일각에서는 자 첫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실제 신안의 햇빛·바람 연금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정부 행정과 기존 이해관계 구조라는 높은 장벽과 마주해 왔다. 한마디로 연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처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초단체의 의지와는

별개로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분명한 점도 있다. 이번 논란은 정책의 취지 자체보다, 설명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행정을 옳은 정책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돼야 비로소 완성된다. 갈등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간 공격이 아니라 신뢰회복이다.

제도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에서 갈린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이해 조정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증폭된다.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정책을 수정하는 것보다 앞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신안의 주민참여형 신 재생에너지모델이 흑여 ‘논란의 사례’로 기록될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은 주민소득 정책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된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제도는 모두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제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연금은 약속이고 약속은 신뢰다. 햇빛과 바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연금이 된 햇빛과 바람 군민들의 신뢰로 지켜야 한다.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강화 관건

이 부여됨으로써 산업발전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넷째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규제 우선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필자가 주장했던 첫 통합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서울특별시장 수준의 위상에 대한 특례가 포함된 점은 다행이다. 또 정부지원금 5조원이 더해지면 총 25조원 재정력을 갖춘 ‘슈퍼지자체’의 탄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국민에게 보여주며 속도전에 대한 일부의 우려마저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39만 9880명에 그쳤고, 2025~2052년 약 26만6000명(-18.4%)이 감소하며 120만명대까지 추리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전남은 2024년 22개 시군 중 13곳(59.1%)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자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직면한 현실 속에 필요불가결 생존 전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행정통합 과정에 남아 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합정사 소재지, 군공항 이전 등 시·도간 갈등 조정과 광주권·동부권·서부권 3대 거점 경제권을 연계한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통합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외와 대도시 흡수 방지를 위한 농어촌 상생방안과 민원행정 공백이 없도록 기초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교육 조직 재편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강화가 관건이기에 행정구역을 키우는 통합을 넘어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분권 재설계가 필요하다.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만큼 독자적 판단과 집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복지, 생활 등 주민 밀착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부재원 확보,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축소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 조직권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설계가 가능해 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첫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가려진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통합 준비 역량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경직된 행정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기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통합 성공 여부를 가를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독자투고

찾길 동물사고 로드킬 예방법

로드킬은 아스팔트 위의 사체나 찢자국의 시각적인 불편함 뿐만아니라 급정거나 사체를 피하려는 차로 인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찾길 동물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할까?

첫째, 주행 중 야생동물 출몰지역 경고판이 있는 위험 구간에서는 서행을 하며 갑자기 출몰할지 모를 동물에 대비해야 한다. 고라니의 경우 야간에 불빛을 동반 2~3초 동안 멈추는 습성이 있어 발견 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한다.

둘째,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사체를 도로 밖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동물의 사체를 도로 밖으로 옮기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엔 해당 도로 관리청(지역번호+120)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사고 지점을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로드킬예방협회에서 개발한 ‘로드킬등록게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로드킬등록게시시스템은 휴대전화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야생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연구하고, 예방법을 숙지해 더 이상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송환 고흥소방 현상대응단 소방장

사설

광주 서구·광산구 1000원 정책 진화중

광주 서구와 광산구 ‘1000원’ 정책이 올해 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고물가·경기침체에 지친 서민들을 위해 1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주차까지 해결하는 가성비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약자 편의정책으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먼저 서구의 복지 브랜드 ‘천원의 동행’은 올해부터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한 통이면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배송까지 전 과정을 1건당 1000원에 지원하는 ‘천원세탁’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또 시각적 감각과 손기술이 뛰어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공간 정리와 수납 컨설팅을 제공하는 ‘천원정리수납’서비스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천원 국시’ 1호점을 개소해 지역 생산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노인·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지역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낸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 말까지 10호점까지 열었다. 또 지난해 증증질환장 병원 이동시 1000원만 내는 ‘천원택시’, ‘천원 긴급돌봄 서비스’, 천원 피크닉 등을 도입하는 등 ‘천원의 동행’시리즈를 이어갔다.

광산구도 지난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12개 가성비 정책 ‘천원 더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천원식당, 천원반찬, 천원병원동행, 천원주차장, 천원 문화마실 등인데 특히 천원식당은 지난해 8만5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였다. 천원주차장도 시행 전 월평균 3만9000대였던 이용 차량 수가 시행후 4만5000대로 늘어났고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민원 건수도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가 이에 힘입어 올해 깊이를 더한 ‘천원정책 2.0’을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원병원동행’ 서비스의 경우 이동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차량을 추가로 도입키로 했다. 또 기존 ‘천원택시’ 이용객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민 일상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하는, 이들 자치구의 천원 정책이 앞으로도 더 확산되길 바란다.

두존쿠의 ‘힘’...혈액 비상 한고비 넘겼지만

유행 디지털 ‘두바이존두쿠기(이하 두존쿠)’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대상 답례품으로 ‘두존쿠’증정 행사를 예고한 날, 광주·전남 헌혈자 수가 평소보다 2.8배나 몰린 것이다. 비상이 걸린 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수준까지 회복시켰다.

‘두존쿠’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먼 카타르의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필링으로 사용해 만든 마시멜로 디지털로 이름에는 ‘두바이’가 들어가지만 정작 두바이라는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개발한 음식이다.

존두·바삭한 식감, SNS에 잘 맞는 빼어난 비주얼, 셀럽들의 인증 샷, 그리고 ‘품질·수급난’이 만들어진 희소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인기다.

‘두존쿠’의 힘은 광주전남혈액원이 증정 행사를 진행한 23일 여실히 드러났다. 올해 1월 기준 하루 평균 356명이던 헌혈자수가 이 보다 2.8배 높은 1002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다음날에는 이를 증명하지 않지만 전남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져 평소보다 2배 가까이 605명이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헌혈 참여가 늘면서 혈액 보유 상황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한다. 지난 23일 기준 3.5일분에 그쳤던 지역 혈액 보유량이 24일에는 4.9일분으로 증가했고, 25일에는 적정 기준인 5일분을 넘겨 5.5일분까지 회복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중앙혈액원 소속 한 간호사의 제안으로 시작해 전국 혈액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전남혈액원도 지역 카페들의 협조로 쿠키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두존쿠’는 단시간에 혈액 보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반짝 카드’지. 장기적인 혈액 수급 안정책이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과거 헌혈의 주축이었던 10대와 20대 인구가 10년사이 각각 35.6%, 18.6% 감소하는 등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이들의 실제 참여도 감소세를 보고 있어 혈액 수급은 학생들의 방학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실질적인 헌혈 교육, 직장·지역 사회의 헌혈 참여 제도적 뒷받침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 | | | | | |
|---|-------------|--|--|-----|--------|--|
|  | | www.GwangNam.co.kr | | | | |
| 회장 양진석 | 대표이사 발행인 | 차재진 | 사 장 편집인 | 이승배 | 주필 김상훈 | 편집국장 최현수 |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 | |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사 회 부 370-701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 | | 논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
|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 | | | |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 | |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 | |